

## 동아시아 '광주진료소' 첫 삽

광주일보·(사)희망나무 등 후원...캄보디아 타케오시 바티에 1호 기공식

동남아시아에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 정신'을 실천할 '광주 진료소'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첫 삽을 떴다. <관련기사 2면>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하로 '광주정신'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열린 기공식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광주일보와 아시아 자원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광주 진료소 추진위원회'는 지난 3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타케오(Takeo)시 인근 바티(Bati)지역에서 진료소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광주진료소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광주지역 의료진,

타케오 주 정부 관계자를 비롯, 진료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캄보디아-광주 친선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을에 한국의 진료소가 지어진다 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에 나온 주민 500여명은 의료진에게 '오훈'(감사합니다)을 연발하며 감사의 뜻을 거듭 전했다.  
'광주 진료소'는 앞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남아 국가에 '광주 인술'(仁術)을 심는 것은 물론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전초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80년 5월,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광주가 정부 폭력에 의한 '킬링필드'라는 비극적 역사를 지닌 캄보디아에 같은 피해자로서 '힐링 캠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는 평가다.  
이곳에 들어서게 될 진료소는 '캄보디아-광주 친선재단' 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면적 330㎡(100평)에 1층짜리 건물 2동 규모로 지어지며, 올해 말 준공된다.  
진료소가 준공되면 현지인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의 사회 등 의료진들이 매일 한차례씩 의료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진료소 개설에 필요한 건축비와 의료장비 및 약품 구입비 등은 광주시와 진료소 개설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전기와 수도,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타케오 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최권일기자kci@kwangju.co.kr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타케오(Takeo)시 인근 바티(Bati)지역에서 지난 31일 광주일보와 (사)희망나무,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광주진료소 추진위원회', 타케오 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진료소 기공식이 열렸다. /캄보디아 프놈펜=최권일기자kci@kwangju.co.kr

## 여야 기초선거 공천폐지 쟁걸음

## 北 개입설 주장 5명 형사고발

6·4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상향식 공천제도·여성 30% 할당 등 6월 국회서 본격논의

5·18 왜곡대책위 법적 대응 착수... '일베' 게시물 8건 등도 손배 청구

'풀뿌리 민주주의' 성패를 가능할 제6회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4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온다.  
내년 지방선거는 기존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세 종자특별시장, 기초단체장 225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 시·도 교육감 17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1년4개월 후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 또 2016년 20대 총선, 나아가 2017년 19대 대선을 향하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로 여겨져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일전을 벌일 태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움직임과 변수, 관전포인트, 판세 등을 전망해본다. <관련기사 5면>

심 '공천 혁신' 이뤄지나  
정치권에 공천권을 놓고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낙하산 공천을 방지하고 주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폐지, 여성공천 비율 확대 등 '공천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새 지도부 구성을 마친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달부터 공천혁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국회 정치쇄신특위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폐지에 대해 지난달 6일 공청회, 22일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엮보이는 만큼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혁신에 대한 의지를 곳곳에서 내비치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일 4월에 이어 10·26 재·보선에서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와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별의원들의 관련 입법 활동도 활발하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소속 김재원 의원은 '중앙당의 밀실 또는 하향식'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쇄신 법안을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공천혁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위

원장으로 하는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 검토위원회가 이달 초 출범 예정이다.  
김 교수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10여명의 당 내의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 7월 중순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정당원투표제를 실시,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도 조만간 구성돼 오는 12일께 향후 활동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 최고위원 측은 20~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는 물론 상향식 공천제도와 여성공천 확대 등 공천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기기자 jkpark@kwangju.co.kr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일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북한군의 5·18 개입설 등을 주장한 이주성, 김명국, 임천용(이하 탈북자)을 비롯한 서석구 변호사와 이주천 원광대 교수 등 5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7면>  
또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5·18 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시국회의를 열고 5·18 왜곡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공식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탈북자 임천용씨와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지난달 13일 TV조선에 출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다"라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 김명국씨는 지난달 15일 채널A에 출연해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1980년 5월 21일 배를 타고 광주 인근 바닷가에 도착해 시민군 행세를 했다"고 말했으며, 함께 출연한 서석구 변호사는 "탈북자들이 합동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5·18 문제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인 이주성씨도 이날 "5·18이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북한에선 누구도 모르나 알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책위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추진하

기로 했다.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대책위는 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 8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하기로 했으며, 일베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 포함된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의 저자 이철산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책자는 판매금지 가져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광주시가 개설한 '5·18 역사 왜곡·훼손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1900여건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복·악의적 게시자는 형사 고발하고, 5·18 역사를 왜곡·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삭제·정정·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진기기자lucky@kwangju.co.kr

## 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등록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등록 폐차 대행업체나 견인 기사(브로커)를 믿고 폐차 의뢰했다가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를 요청하시면 견인부터 말소 등록까지 무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뿐만 아니라 고철가격도 드립니다.

이제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안심하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찾으시려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www.kadra.or.kr) 또는 전화(062-527-7781)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무등록 불법업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류	차량중량(kg)	고철단가(원)	폐차가격(원)
경형승용차(1,300CC미만)	710	280	250,000
소형승용차(1,500CC미만)	971	280	350,000
중형승용차(2,000CC미만)	1,140	280	400,000
대형승용차(2,000CC이상)	1,280	280	450,000

• 가격산출근거 : 폐기물을 제외한 차량중량의 현재 고철단가 적용  
• 2002년식 이전 노후 차량의 기본가격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광주전남지부    문의전화    062)527-7781